

행정법총론

1. 통치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은 통치행위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지만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② 대법원은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에 대한 판단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는 사면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된다고 보았다.
- ④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령을 국가긴급권의 일종으로서 통치행위로 보았다.
- ⑤ 헌법재판소는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행위일지라도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2. 행정행위의 실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행정행위의 대상소멸
- ② 행정행위의 목적달성
- ③ 사기 등 부정행위
- ④ 해제조건의 성취
- ⑤ 행정행위의 중기도래

3.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
- ②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 ③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훈령, 예규, 지시 등이 있다.
- ④ 의무가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당해 기관은 행정규칙에 구속된다.
- ⑤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 고시, 예규의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고유한 서식에 따라야 한다.

4.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조치들 가운데 항고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없는 것만으로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ㄱ. 불법주차된 차량의 견인조치
- 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 ㄷ. 경찰서장의 통고처분
- ㄹ. 계속적 성질을 갖는 행정상 즉시강제
- ㅁ. 체납처분으로서 공매처분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5.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가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무행위는 공행정작용을 말하며, 사법(私法)상의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부작위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령상 명문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며,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③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인정된다.
- ④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⑤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甲은 관할 A행정청으로부터 2011년 10월 1일 30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고, 동년 10월 15일 2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이후 동년 10월 20일 甲에 대한 과징금부과권한이 A행정청에서 B행정청으로 승계가 되었고, 甲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동년 10월 30일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판례에 의할 때,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는?

- ① 10월 1일 자 과징금 300만원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 ② 10월 15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A행정청을 피고로
- ③ 10월 1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 ④ 10월 15일 자 과징금 200만원 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 ⑤ 10월 15일 자 100만원 감액처분에 대하여 B행정청을 피고로

7. 행정법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고관계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인 지위에서가 아니라 재산권의 주체로서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②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는 견해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사법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 ③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 ④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인은 공무원수탁사인이 아니다.
- ⑤ 판례는 산림을 무단형질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을 승계한 상속인이 그 복구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8.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총칙적인 규정이 없다.
- ② 명문의 금지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일신전속적인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다.
- ③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인의 공법행위에 있어서는 유효하다.
- ④ 실정법은 발신인의 이익을 위하여 발신주의를 택하기도 한다.
- ⑤ 대법원은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성립할 때까지 자유로이 보정이나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9.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행정절차법」에는 확약, 공법상 계약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③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 ④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행정절차법」은 문서열람청구권을 청문절차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10.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헌법상 근거조항을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 ② 판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③ 판례는 시민단체 등에 의한 행정감시목적의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 ④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만약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행정상 과태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② 판례는 과태료부과처분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③ 현행 법률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를 할 수 있다.

12. 행정심판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③ 행정심판 제기요건의 불비로 인하여 각하된 경우에도 「행정소송법」 제18조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 ④ 청구의 변경결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변경된 청구나 이유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 ⑤ 판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뜻한다고 보았다.

13.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② 실정법은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 ③ 행정법의 일반원칙의 상당부분은 헌법원칙의 구체화이다.
- ④ 행정관습법은 성문법의 규정이 불비된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성문법과 저촉되는 행정관습법은 인정될 수 없다.
- ⑤ 행정법의 기본원칙과 모든 제도는 포괄적으로 법률로 정해져 있다.

14.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도 허용된다.
- ②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이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율할 수는 없다.
- ③ 법규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도 법규명령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집행명령은 상위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위 법령의 수권이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 ⑤ 훈령형식의 행정입법이라도 상위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법령보충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15. 甲은 관할 행정청에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가 행정청에 도달한 때에 신고는 효력을 발생한다.
- ②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당해 신고대상인 행위를 하더라도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수리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④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甲의 신고의 수리가 거부되었음에도

당해 신고대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 ⑤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관할 행정청은 甲의 신고의 수리 여부에 대하여 제량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16. 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대상으로 한다.
 ② 불이행된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어야 한다.
 ③ 다른 수단으로는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의무의 불이행을 방지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허용된다.
 ⑤ 판례는 대집행요건의 입증책임이 행정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17. 손실보상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도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면, 손실보상은 사법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②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증감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③ 「하천법」상의 손실보상청구를 공법상 권리로 보아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특정 사기업이 생활배려영역에서 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사기업을 위해서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⑤ 재결절차에서 정한 보상액과 행정소송절차에서 정한 보상금액의 차액이 수용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이상 지연손해금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았다.

18.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병역법」상 군의관의 신체등위 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②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라고 보았다.
 ③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다른 행정청의 동의를 얻어 처분을 하는 경우 다른 행정청의 동의는 법적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
 ⑤ 한국전력공사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에 의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았다.

19. 다음 중 허가에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③ 건설업면허의 갱신이 있으면 기존면허의 효력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장래에 향하여 지속된다 할 것이고, 갱신에 의하여 갱신전의 면허는 실효되고 새로운 면허가 부여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면허갱신에 의하여 갱신 전의 건설업자의 모든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거나 일정한 시일의 경과로써 그 위법사유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주류제조업면허는 제조장단위의 이전성이 인정되는 소위 대물적 허가로서 허가받은 자의 인격변동이 당연히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⑤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사법상의 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에서는 행정심판전치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행정심판전치절차의 이행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③ 행정소송 제기 후 그 변론종결시까지 행정심판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은 위법한 행정작용만을 그 대상으로 하나, 행정심판은 위법한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부당한 행정작용도 다룰 수 있다.